

FTA FOCUS

미-중 통상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박현재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미-중 통상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박현재

현)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현) 인도연구원 인도비즈니스포럼 위원
현) 저널 '창조와 혁신' 편집위원
전) LG 생명과학 인도법인장



1. 들어가며

한국대학에 다니는 군필 4학년 졸업반 대학생 홍길동씨는 요새 한숨만 나온다. 미중 통상마찰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며, 다자간 통상체계가 역할을 하지 못하여 수출이 경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한국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아 청년 취업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알바자리로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는데 이마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알바자리 숫자가 줄어 이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 막막하여 대학에 특강을 온 유명한 교수님께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여쭙어 보았다. 유명한 교수님은 미중 통상마찰의 현황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전략에 대한 답을 해주셨다.

2. 미중 통상마찰의 현황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 미국 트럼프정부는 미국 내 경제의 문제는 무역수지의 적자가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중국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약 47%에 달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미중 통상마찰의 근본적인 발생 이유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의 수입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분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대두는 수출 비중이 높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미중 통상분쟁은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미중간 교역이 감소하면 對 중국향 한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TV, 핸드폰 등 소비재 전자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높은 경합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 경합제품은 오히려 미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중간 통상분쟁은 결국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3. 전략적 대응방안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이 심화되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할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이에 대한 해법은 단순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한 두가지 이슈를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대체 해외시장 개발 그리고 한국 인재의 지적 경쟁력 제고라는 크게 3가지로 대응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1)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수 시장 활성화 및 확대

(1)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정책 시행 -

인간친화적 지역맞춤형 정책

한국 내수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간친화적 지역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빨리 개정해야 한다. 서울의 편의점 알바와 지방도시에 있는 편의점 알바의 최저임금이 왜 같아야 하는가? 산업별로 평균 이익률이 차이가 나는데 왜 모든 산업이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는가?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로 정책은 결국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 유리하고, 직업을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책이다. 진정한 인간친화적 지역맞춤 정책을 시행하면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소위 광주형 일자리도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 중의 하나이므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2) 혁신주도형 성장 정책 -

한국의 서쪽벨트를 4차 산업 규제 프리존으로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트렌드를 잘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머신러닝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한국 내 규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되기 어렵다. 정치적인 논리와 이유로 핑계를 대지 말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즉, 혁신주도 성장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풀기 어려우면, 법 개정을 통한 지방 분권화로 일부 지역에서 완화된 규제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전라도와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서쪽 벨트를 대상으로 규제를 확 풀어 이 지역을 4차 산업 테스트베드로 육성하였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관련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하고, 해외이전 연구개발센터의 본국 재이전도 이루어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4차 산업 관련 규제가 한국보다 덜한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규제 완화는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3) 출산율 증가를 위한 노력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내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출산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내수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한국경제에 보낼 수가 있어 선순환 효과가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전 국민적인 출산율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사회에서는 다자녀의 출산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종교적 또는 문화적인 차이점을 감안하다고 해도 한국의 현실과 너무 다른 출산 환경인데, 이는 다양한 육아지원정책과 안정된 교육환경 등이 한국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있고 매력적인 출산정책을 육아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고안해내야 하며 관련 정책은 육아관련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은 국민소득, 무역규모 등의 경제지표로 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지만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추지 못하면 정체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자유구역을 조성 -

금융 자유구역, 엔터테인먼트 자유구역,
창업 자유구역, FTA 자유구역 등등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유구역을 만들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여의도지역을 금융자유구역으로, 먹거리와 놀거리가 풍부한 경상도와 전라도의 특정지역을 엔터테인먼트 자유구역으로, 평균 학력 수준이 아주 높은 대전 대덕지구를 창업 자유구역으로, 다양한 창의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충청도지역을 교육자유구역으로



그리고 새만금지역을 FTA 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내수경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5) 제 2 내수 시장 개발 -

북한을 제 2 내수시장으로 개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북한 시장을 제 2 내수시장으로 개발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5개의 글로벌 공단을 세우는 것이다. 정권교체로 인한 공단폐쇄 리스크가 상존하는 기존의 개성공단 모델이 아니라, 중국기업과 러시아 기업, 미국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단 설치를 개성 등 5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전역에 고속 인터넷을 설치하여 정보혁명 및 4차산업 혁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권 등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대체 해외 시장 개발 지속 추진 - 아세안 시장, 무슬림 할랄 시장 및 인도 시장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국의 총수출(2017년)에서 미국과 중국(홍콩포함) 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아직까지 매우 높다.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인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한 시장진출 및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디딤돌로 하여 무슬림 할랄 시장 개발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 한편, 일본은 중국을 견제할



파트너로 인도시장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함이 부족한 것 같다. 인도를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단순히 수요시장으로만 보지 말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인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또한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인도는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고, RCEP 체결시 아세안-인도 간 무역 규모는 2022년까지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또 아세안 여러 나라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인도에서 유입된 인도 교포가 약 6백만명으로 매우 중요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와 아세안을 묶어 외교 및 통상 정책을 시행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인도-아세안 미래공동체”로 확장하여, 인도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한국인재의 지적 경쟁력 강화

(1) 상호 협력하는 집단지성 실천형 창의 인재 양성해야

한국의 대입제도는 서열구분을 전제로 한 특정과목 중심 교육 시스템이다.

다양한 인재의 서열구분을 위하여 대입전형제도의 다양화, 내신 성적 반영비율의 조정, 논리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논술시험의 도입 등의 보완을 통하여 획일적인 서열구분으로 인한 역효과를 일부 상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교육체계의 획일성은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한 집단지성 실천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장애가 된다.

경쟁의 척도가 다변화되어야 깊이 있는 다양한 인재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고, 사회는 개인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발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수만년의 역사가 축적되어 발전될 수 있었던 현재의 문명은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을 중심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편익의 혜택범위가 넓어지는 등의 변화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과 변화를 자유롭게 꿈꾸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여, 암기 및 실수 덜하기 경쟁으로 서열을 구분하는 현재의 교육체계 보다 서로 협력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험점수가 아닌 본인의 관심분야와 적성에 따라 대학을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한국의 군대를 4차산업형 혁신인재양성의 산실로 탈바꿈시켜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창업국가가 되어 전 세계에서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배출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면 군대에서의 학습이 그 요인 중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제대한 후 완전히 다른 인재가 된다. 한국도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여 군대에서 4차산업과 관련된 코딩, 빅데이터 처리 기술, 머신러닝 등 관련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군대내 에서의 창업을 적극 장려한다면 한국의 군대가 혁신 인재 양성의 산실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대체 해외시장 개발 그리고 한국 인재의 지적 경쟁력 제고라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한국 경제가 미중 통상분쟁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FTA TRADE REPORT

